

보도시점 2026. 6. 18.(목) 배포 시 배포 2025. 6. 18.(목)

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

< 보도 주요내용 >

6월 18일(목) 농민신문은 「'농지 전수조사'에 강제되거 ... 갈 곳 잃은 친환경 농가 '막막'」이라는 제목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부채지주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, 공공임대농지 우선 공지 등 기존 친환경 임차농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>

농림축산식품부(이하 '농식품부')는 일부 부채지주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별 정비기간*(5.18~7.31)을 운영, 서면 계약 전환과 한국농어촌공사(농지은행) 위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 또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(1811-8852)를 6월 1일부터 가동 중이며, 임대차 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.

* 농지은행 위탁건수(5.18~6.12) : ('25) 7,506건 → ('26) 12,130 (전년동기비 62%↑)

또한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유지·확대를 위해 '25년부터 친환경단지 내 또는 친환경 농지에 연접한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으며, 농지은행 사업 선정 시 친환경 농가에 최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
아울러, 친환경단지 내 일반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경우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, 농지은행포털(www.fbo.or.kr)에 임대 정보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관심 지역(농지)이 등록될 경우 문자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더 나아가 농식품부는 친환경인증 농지가 농지은행에 매입·위탁될 경우, 이를 인근 친환경 농가에 우선 공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임차농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농업정책관 농지과	책임자	과 장	김기환 (044-201-1731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준 (044-201-1732)

